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성명서>

사도광산 추도식, 누구의 어떤 희생을 어떻게 추도한다는 말인가? 한국 정부는 굴욕 외교를 당장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20일(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에 따른 추도식을 11월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추도식은 7월 26일 한국 정부가 외교 성과로 자화자찬한 ‘협상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굴욕 외교의 연장선이다. 추도식은 일본 정부의 공식 행사가 아니라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개최한다. 행사의 명칭도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추도할 대상도 불분명한 ‘희생자’라고 알려졌다.

추도식의 명칭만 보아도 누구의 어떤 희생을 어떻게 추도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추도식의 명칭은 당연히 ‘사도광산 강제노동 희생자 추도식’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나아가 조선인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에 대한 사죄를 언급하기는커녕 추도사의 내용조차 협의 중이고, 일본의 정부 관계자도 아직 누가 참가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피해자 유족 11명에 대한 모든 비용도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고 한다. 니가타현의 하나즈미 히데요 지사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추도식에 대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관여해 온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자리 같은 느낌’이라고 밝혔다.

과연 사도광산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강제노동 희생자의 추도식을 이렇게 일본에 구걸하며 치를 수밖에 없는지 엎드려 절 받기도 정도가 있다. 이것이 한국 정부가 말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란 말인가. 우리가 바라는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모습’은 조선인 희생자의 명부를 공개하고,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추도식에 희생자 유족을 초청하여 일본 정부 대표자가 강제노동 희생자를 진심으로 추모하고 유족들에게 공식으로 사죄하는 것이다.

실상 제목만 추도식일 뿐 사실상 사도광산 등재 보고회나 다름없는 추도식을 한국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합의에 따른 추도식이고, 한국 정부가 비용까지 부담하여 유족들을 모시고 가겠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 강제노동 피해자들을 진심으로 기리고자 한다면 왜 정부 주최가 아닌 민간단체 주최로 행사의 격이 낮아졌는지, 추모할 희생자 명단은 왜 공개하지 않는지, 진정성 있는 사죄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해야 마땅하다. 조선인 강제노동을 숨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합의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자 형식적인 졸속 행사로 전락하지는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사도광산에는 1,500여 명의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있었다. 조선인 강제노동의 실태를 증명하는 많은 문헌과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음에도 일본은 역사 왜곡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동조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에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비롯한 전체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피해자를 진심으로 추모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해 나갈 것이다.

2024년 11월 21일

민족문제연구소